

네트워크회의
인권활동가네트워크워크숍

울산 아프간 난민 지원 및
한국 난민 인권 실태

김지림
[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]

1. 대구 무슬림 사원

- 대구 북구청으로부터 적법한 건축 허가를 받고 진행되던 사원 공사
- 주민들로부터 민원 접수된 당일 사전통지, 의견제시 기회 부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'사원 일대 슬럼화 우려', '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우려' 등을 이유로 공사 중지 처분
- 주민들의 민원이 실제 국가에 의한 공사 중지 처분으로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공사 중지 반대에 정당성 부여
- 이후 대구시는 물론 대구 북구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'주민들이 역차별당하는 사안'이라는 공식 발언을 이어가며 중재 혹은 갈등 해소 의지를 보이지 않고 사실상 방치
- 대구 북구청의 위법한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하여 법원이 취소 판결을 하였고 대법원에서 확정됨
- 사법부에 역할을 넘기고 심지어 계속되는 주민들의 반대 및 방해행위로 인해 그 판결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 또한 방치함
- 2023.09. 유엔 종교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해당 사안을 심각한 종교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는 사안으로 보고 대한민국 정부와 대구시에 입장 표명 및 계획을 질의한 상태
- 국가의 인종 차별적 행정이 부추기고 방치한 갈등

2. 울산 아프간 난민 정착 건

- 2021.08.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탈레반에 항복한 이후 한국에 협력한 아프간인 391명이 한국 정부의 비밀작전을 통해 입국
- 29가구 157명이 울산에 정착
- '특별기여자'라는 용어는 한국 정부의 난민 보호에 대한 의무를 지우고 난민 인정을 대가적이고 시혜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림. 초기 난민 입국 직후 숙소 출입 제한, 면담 제한, 시민사회와의 협업 단절 등 국가의 철저한 통제 하의 기본권 제한이 문제 됨
- 정부 주도의 난민 피난이자 특히 울산교육청의 의지와 정부 예산 지원으로 인해 난민 아동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 존재

3. 대한민국 난민제도 및 이민정책의 나아갈 방향 제안

- 1994년 난민보호협약에 가입한 이후 2013년 국내 자체 난민법 도입
- 1994년부터 2021년 말까지 평균 1.8%의 난민인정률
- 2022년 말 기준 2% 난민인정률
- 난민 보호에 대한 일관된 철학이나 보호의지 없이 '인권 강국'이라는 이미지를 위해 활용되어 온 난민제도
- 김현미 교수는 대한민국이 “‘외국인 체류 질서’ 확립이란 이름으로 비국민, 특히 아랍계 무슬림을 사안에 근거하지 않는 치안 통치의 대상으로 ‘동질화’ 시키고 있다”라고 분석한 바 있음
- 2018년 500여 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 입국, 2022년 울산 아프간 난민 정착, 2021년부터 지금까지 진행 중인 대구 무슬림 사원 사건 등 무슬림과 관련한 일련의 사안에서 국가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 엿볼 수 있음
- 타국의 박해를 피해 한국에 보호를 요청한 난민 신청자, 학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학생들이 안전하게 정착하고 차별 없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 필요